

지역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



배경 및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이 지역의 산업육성 기반을 확충·확대하는데 주력한 결과, 지역별로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및 잠재력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에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청이 25개 사업(세부내역사업 기준으로는 44개)을 통해 1조 6,79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광역발전계정 중에서 2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SOC사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산업·기업지원, 인적자원개발 및 산학협력, 과학기술진흥 등)를 개별적으로 확충·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원사업 간의 연계 추진을 통해 이들 요소의 결합·융합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개선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여건·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은 추진체계가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개별사업 간의 칸막이 운영이 고착화되어 있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세부과제 단위의 예산편성, 사업기획·조정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업별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통합적 기획·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의 구조 개편과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지역산업지원사업을 광역발전계정의 지역자율형 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서 지역 차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중석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jsjung@kiet.re.kr

